

초등 역사 교육과정의 개정과 사회과 성격의 재정립

- 다시 통합의 문제를 생각한다.

민 윤

도일초등학교

사회과의 상황

“사회과는 사회 현상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 교과이다.”

단순하면서도 명쾌하게 사회과의 성격과 목표를 설명해주는 이 문장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것은 필자만의 생각일까?

7차 교육과정까지는 역사와 지리, 그리고 일반사회는 사회과라는 한 지붕의 울타리 안에서 ‘어색한 동거’ 정도는 유지하였다. 그러던 것이 2007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초등 5학년에 역사가 전면 배치되면서 완전한 별거로 나아갔다. 급기야 2011 개정교육과정¹⁾에서는 교육과정단계에서부터 역사가 분리되어버리는 합의 수준에 이르렀다.

물론 이혼의 당사자인 역사와 사회과 혹은 역사와 지리, 혹은 일반사회가 당초 금슬 좋은 부부였는지 따져볼 필요는 있다고 하더라도 상황이 이렇게 된 데에 따른 반성과 규명의 책임이 ‘사회교과교육학회’에 일정 부분 있는 것은 분명하다.²⁾

반성과 책임의 규명의 방향이 당위적인 사회과 통합의 측면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당초에 짝이 맞지 않는 역사와 지리, 그리고 일반사회라고 하는 학문들을 ‘사회과’라고 하는 울타리로 혼인시킨 것 자체가 문제였을 수도 있으니 말이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은 간단한 문제가 아닐 것이다. 학회의 논의이니 만큼 학문적인 차원의 통합논의가 이뤄져야 마땅하지만 사실은 사회과 통합 혹은 교육과정 전개의 양상만을 놓고 보자면 이것은 학문의 논리라기보다는 ‘교육과정 정치학’의 문제이다. ‘주변국의 역사왜곡’, ‘영토 갈등’, ‘지속가능한 발전’ 등의 구호들 가운데 어떤 것도 교육의 문제이거나 학습 심리와 관련되었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1) ‘2011년 역사과 교육과정’의 명칭에 준하여 필자가 편의상 이와 같이 명명하였으며 공식적인 명칭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2) 물론 이 글이 그러한 책임의 소재를 따지는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책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우리 학회의 정체성과도 일정 부분 관계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아울러 필자 또한 그러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 또한 밝혀둔다.

어찌 보면 사회과교육과정의 큰 틀에서 초등역사는 아주 작은 부분이며 사회과에 종사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실 초등에 별 관심이 없다고도 볼 수 있다. 초등이야 어차피 국정으로 묶여 있고 소위 말하는 3분법의 논리에 따라 단원별로 적당히 나누면 된다고 생각해왔기 때문이다. 사회과교육과정 개정 작업에서는 논란과 문제가 되어왔던 것은 중학교의 내용 구성이며 역사와 지리, 혹은 일반 사회의 시수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선택과목들로 이루어지는 고등학교 사회과 역시 사회과인들의 관심 밖 영역이었다. 고등학교 내용은 어차피 '그들만의 리그'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³⁾

2011년 사회과교육과정 개정에서도 역시 초등 역사가 특별히 이전에 비해 주목을 받았다고 보지는 않는다. 다만 필자가 주목하는 부분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초등 역사를 중등과 일관되게 구성하려는 체계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과 아울러 초등 역사가 사회과교육과정의 영역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필자는 이러한 전조들로부터 '사회과 성격의 재정립'의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초등역사를 비롯한 사회과교육과정의 개정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사회과 교육과정 개정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갖는 문제점을 지적함과 아울러 사회과교육의 목표와 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현재의 상황은 '위기'를 넘어 매우 '위험'한 상황임을 밝힐 것이다.

재정립의 전조

현재 '2011 역사교육과정' 개정 작업은 막바지에 이르렀다. 지난 3월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원회(이하 역개추)가 출범한 이래로 '역사교육강화'를 이루기 위한 움직임이 진행되어 왔다. 중국의 동북공정 추진과 아울러 일본의 독도 영토 주장 등 주변국들의 역사왜곡이 진행되어 온 가운데 사실상 '역사교육강화'는 어느 정부에서나 외쳐왔던 식상한 구호였다. 다만 이명박 정부 초기 노무현 정부에서 역사교육강화를 통해 '역사과 독립'과 '한국사 필수' 과목 지정이 철회된데 따른 실정을 만회하기 위해 '한국사 필수'라는 떡고물을 던져준데 불과하였다. 그나마도 진정한 의미의 '한국사 필수'가 아니었고 정작 중요한 수능에서 한국사 필수 과목 지정은 빠져 있는 어정쩡한 방식의 '역사교육강화'의 논의만 이루어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처음부터 '역개추'에서 할 수 있는 것이란 상당히 제한적인 부분에 불과한 것이었고, 실제로 역개추 위원들 사이에 역개추의 위상에 대하여 설왕설래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상황을 초등 역사에 한정지어 논의한다면 중등에서와 같은 '역사과 독립'의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사회생활과의 이름으로 사회과가 도입된 이래로 1,2차 교육과정기 동안에는 사회생활을 통합적으로 경험하기 위한 교과 구성 체제를 어느 정도 유지하였다. 그러다가 3차 교육과정기에 와서 사회과에서도 '국적 있는 교육'을 해야 한다는 박정희 대통령의 의지⁴⁾에 따라 초등에서도 '국사교과서' 발행이라는 상황이 발생하였다.⁵⁾ 이후 4차와 5차에서 국사교과서 발행은 중단되고 명목상으로 사회과로 통합이 되기는 하

3) 고등학교 선택과목들 가운데 필수과목 지정과 관련된 논란은 존재한다. 하지만 그러한 논란은 사회과만의 논란이라기보다는 총론 수준의 논쟁이며 사회과 내에서 어찌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4) 1972년 3월 24일 문교부 주최로 대구에서 열린 제 1회 전국교육자대회에서의 박정희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국적 있는 교육'을 천명하였다(이동원, 2003: 93).

5) 당시 정치사회적, 교육문화적 조건이 배경이 되어 1972년 7월 '국사교육강화위원회'가 조직되었다. 국사교육강화위원회는 이선근, 강우철, 이기백, 이광린 등 2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당시 국사교과의 내용체계화 작업인 '국사교과독립 준거

였지만 이후 사회과 내에서 ‘역사’는 상당히 ‘특별한 지위6)’를 차지하게 된 것만은 분명하다.

6차와 7차 교육과정에서도 역사 내용이 6학년에 한 학기 이상 연대기와 통사 형태로 제시되었다. 사실상 제1,2차 교육과정기에서 ‘사회생활을 통합적으로 인식하는 교과’로서의 사회과의 성격은 상당 부분 희미해진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 사회과 전체로 볼 때는 어쨌든 내용배열의 원리가 존재하였고, 초등을 담당하는 인적 구성이 존재하였으며 일부 단위에서는 본질적인 형태의 통합적인 접근7)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던 것이 2007개정 교육과정에 와서는 5학년에 1년 동안 역사 내용이 전면 배치되면서 이제까지 사회과에서 통합의 의미는 교과를 싸고 있는 ‘보자기’ 정도의 역할에 불과하게 되었다. 3학년에 통합 단원이 존재하였고, 역사와 지리, 일반사회로 이루어진 ‘사회’라는 교과서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학년 역사는 물론이고 4,6학년의 경우에도 단위별로 뜯어보면 개별 학문의 성격이 ‘정직하게’ 드러나는 것이었다. 이는 중등의 그것과 별반 차이 없는 내용 구성이라고해도 지나치지 않았다. 그나마 초등 사회과를 담당하는 인적 구성이 존재하였다는데 위안을 삼을 수도 있겠지만 애초부터 초등 사회과의 통합적이고 일관된 구성에 관심이 없는 상황에서 3학년부터 6학년 까지 일관된 내용 구성의 원리나 내용 배열의 원칙을 기대하기는 힘들었다.

따라서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초등 사회과를 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8) 오직 관심 있는 것은 각각의 학문 내용이 어느 정도의 분량을 차지하게 되는지 혹은 몇 학년에 위치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은 이전까지 사회생활과 이래로 존재해왔던 ‘사회과’ 혹은 ‘초등사회과’라고 하는 교과 성격의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과의 위기’는 지난 수년간 있어 왔지만, 이제는 진정 사회과(혹은 사회교과교육학회)에 ‘위험한 상황’이다.

개정의 전개

2011 개정교육과정에 따라 초등 사회과 역사 분야의 개정은 전술한 대로 국사편찬위원회와 역개추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사교육과정 개정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6월 30일 공청회를 개최한 이래 7월 13일에는 개정 시안이 발표되었다. 다음의 <표-1>은 공청회와 개정 시안에서 제시한 초등 사회과의 내용 체계

안’을 만들고 이에 따라 주체적인 민족사관 확립을 위하여 학교 국사 교육과정의 구조적 개정 방안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작성, 이를 통하여 국사과의 독립과 학교 교육과정에서의 필수교과화를 건의하게 된다(이동원, 2003: 94). 이러한 상황은 어찌 보면 2011년 현재 구성되어 운영중인 ‘역개추’ 활동의 배경 및 활동 상황과 매우 유사한 점이 많다고 할 수 있다.

- 6) 초등 사회과에서 역사는 일반사회와 지리와는 달리 한 학기 혹은 1년 동안 다른 내용들과의 섞임 없이 연속적으로 제시되는 형태로 구성되었다. 역사 내용이 다른 내용과 일시적으로 통합적인 구성이 이루어지기도 하였지만 대개 한 학기 혹은 1년 단위로 역사내용은 연대기의 형태로 일관되게 구성되었다. 이러한 특징은 지리, 혹은 일반사회 내용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역사만의 특별한 내용 제시 방식이어서 사회과에서 특별한 지위를 정해 왔다고 해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 7) 본질적인 형태의 통합적인 접근이란 역사와 지리, 그리고 일반사회 내용이 단위 내에서 기계적으로 만나는 양적인 통합을 의미하지 않고 하나의 주제 혹은 문제를 중심으로 역사와 지리, 일반사회의 내용과 방법론이 질적으로 통합되는 것을 의미한다.
- 8) 물론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사회과 내용 배열의 원리로 ‘탄력적 환경 확대법’이 제시되기는 하였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작업이 이루어진 뒤 교육과정을 설명하는 방어적 이론일 수는 있어도 교육과정 전체를 일관되게 이끌어주는 시퀀스 논리라고 보기는 힘들다.

표이다. 물론 역사교육과정 공청회이니 만큼 역사 영역의 내용을 제외한 일반사회와 지리 내용은 2007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와 다르지 않다. 역사 내용의 경우도 ‘다양한 문화가 발전한 고려’래 7월세계와 활발하게 교류한 고려’로 바뀐와 개과 ‘새로운 문물의 수용과 민족운동’이 ‘근대국가의 수립과 민족 운동’으로 바뀐와것 외에는 달라진 것이 없다. 아직 까지 최종적으로 교육과정 내용이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속단할 수는 없지만 초등 역사 내용 자체는 7월 13일의 개정 시안대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⁹⁾

<표-1> 2011 개정교육과정 사회과(역사) 내용 체계표

학 년	역사 영역	지리 영역	일반 사회 영역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가 살아가는 곳 ◦사람들이 모이는 곳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 고장의 정체성 ◦이동과 의사소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장의 생활문화 ◦다양한 삶의 모습들
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 지역의 자연환경과 생활 모습 ◦우리 지역과 관계 깊은 곳들 ◦여러 지역의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 자치와 지역 사회의 발전 ◦경제생활과 바람직한 선택 ◦사회 변화와 우리 생활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 역사의 시작과 발전 ◦세계와 활발하게 교류한 고려 ◦유교 문화가 발달한 조선 ◦조선 사회의 새로운 움직임 ◦근대 국가의 수립을 위한 노력과 민족 운동 ◦대한민국의 발전과 오늘의 우리 	-	-
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름다운 우리 국토 ◦환경을 생각하는 국토 가꾸기 ◦세계 여러 지역의 자연과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 경제의 성장과 과제 ◦우리나라의 민주 정치 ◦정보화, 세계화 속의 우리

그런데 겉으로 드러난 변화 내용과는 달리 실제로 2011 개정교육과정의 내용은 역대 교육과정 가운데 매우 큰 변화를 겪은 교육과정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그 이유는 다음의 <표-2>를 보면 알 수 있다. 2011년 7월 9일 열린 사회과 교육과정 개정 공청회 자료집에 수록된 ‘일반사회/지리’ 내용 체계표 중 초등 부분만을 제시한 <표-2>를 보면 위의 <표-1>과 유사점과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다. <표-1>은 역사, <표-2>는 일사/지리 중심으로 다룬 것이어서 <표-1>은 ‘일사/지리’, <표-2>는 역사 내용의 경우 이전의 2007 개정교육과정의 내용과 달라진 것이 없다. 즉 서로 각자의 영역 외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다.

한편 두 내용체계표에서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3학년의 내용이다. 3학년의 내용에 제시된 부분은 <표-1>의 경우 2007 개정 교육과정의 3학년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았지만, <표-2>에서는 3, 4학년을 묶어 제시하였다. 또한 이를 수정한 <표-3>에서는 형식적으로는 지리/일사/역사 영역을 포괄하여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2007개정 교육과정에서 역사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이는 ‘고장의 생활 문화’ 단원이 ‘달라지는 생활 모습’으로 바뀌면서 단위 자체의 역사적 성격이 감소하였다. 또한 ‘우리 고장의 정체

9) 이 글을 작성하는 과정에 8월 1~2일에 ‘교과 교육과정 개정(안) 현장 적합성 최종 검토 협의회’가 있었고 개인적으로 자료를 구할 수 있었다. 다만 이 자료 역시 최종 확정된 자료가 아니고 자료 자체의 보안적 성격이 있어 자료의 일부만 인용하고자 한다.

성' 단원은 대폭 수정되거나 삭제되었다. 형식적으로는 <표-4>에서 '우리 지역 다른 지역' 단원에 일부 성격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고장의 상징에 대한 역사적, 지리적, 사회문화적 통합적 접근을 시도하였던 단원의 취지의 성격이 사라졌다. 또한 지역의 고유한 역사, 상징, 문화 그리고 행사 등을 통해 '지역의 정체성'에 대하여 접근하고자 했던 취지 또한 없어졌다고 볼 수 있다.

<표-2> 2011 개정교육과정 사회과(일반사회, 지리) 내용 체계표

학 년	지리 영역	일반사회 영역	역사 영역
3~4 학 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가 살아가는 곳 ◦이동과 소통하기 ◦사람들이 모이는 곳 ◦달라지는 생활모습 ◦우리지역, 다른 지역 ◦도시와 촌락 ◦주민자치와 지역사회의 발전 ◦경제생활과 바람직한 선택 ◦다양한 삶의 모습들 ◦사회변화와 우리 생활 		
5~6 학 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살기 좋은 우리국토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국토 ◦세계 여러 나라의 환경과 생활모습 ◦우리 경제의 성장과 과제 ◦우리나라의 민주정치 ◦정보화, 세계화 속의 우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나 된 거래 ◦다양한 문화가 발전한 고려 ◦유교 전통이 자리 잡은 조선 ◦조선 사회의 새로운 움직임 ◦새로운 문물의 수용과 민족 운동 ◦대한민국의 발전과 오늘의 우리

<표-3> 2011 개정교육과정 사회과(일반사회, 지리) 내용 체계표(수정안)

학 년	지리 영역	일반사회 영역	역사 영역
3~4 학 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가 살아가는 곳 ◦달라지는 생활모습 ◦촌락의 형성과 주민 생활 ◦민주주의와 주민자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동과 소통하기 ◦우리지역, 다른 지역 ◦경제생활과 바람직한 선택 ◦지역 사회의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람들이 모이는 곳 ◦도시의 발달과 주민생활 ◦다양한 삶의 모습들 ◦사회 변화와 우리 생활
5~6 학 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살기 좋은 우리국토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국토 ◦동아시아 나라의 환경과 생활 모습 ◦세계 여러 나라의 환경과 생활모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 경제의 성장과 과제 ◦우리나라의 민주정치 ◦우리 사회의 과제와 문화의 발전 ◦정보화, 세계화 속의 우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 역사의 시작과 발전 ◦세계와 활발하게 교류한 고려 ◦유교 문화가 발달한 조선 ◦조선 사회의 새로운 움직임 ◦근대 국가의 수립을 위한 노력과 민족 운동 ◦대한민국의 발전과 오늘의 우리

특히 <표-3>를 보면 3~4학년에서 '도시와 촌락'이 각각 '도시의 발달과 주민 생활'과 '촌락의 형성과 주민생활'로 분리되었고 '주민 자치와 지역 사회의 발전'은 각각 '민주주의와 주민자치'와 '지역 사회의 발

전'으로 분리되었다. 또한 5~6학년에서도 '동아시아 나라의 환경과 생활 모습'과 '우리 사회의 과제와 문화의 발전' 단원이 추가되었다. 공청회에서 어떤 지적을 받고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는지는 모르지만 <표-2>에서 <표-3>으로 내용이 수정되는 과정을 보면 단순히 '개별 학문별 단원 수의 증가'라고 밖에는 이해하기 힘들다.

정리하자면 역사과 공청회 자료인 <표-1>의 경우 '역사 내용의 계열성'에만 관심을 둔 나머지 3학년을 비롯한 다른 학년의 내용 구성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다. 심지어 3학년에 포함되어야 할 '역사' 내용에 대해서도 관심을 두지 않아 결과적으로 <표-2>와 <표-3>에서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도록 방조하였다.

<표- 4> '5. 우리지역 다른 지역' 내용 요소

<p>5. 우리 지역, 다른 지역</p> <p>이 단원은 우리 지역의 형성과 발전이 다른 지역과 밀접한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 설정하였다. 지리적, 역사적, 사회적으로 관계가 깊은 지역을 선정하여 지역 간에는 상호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이해한다. 지도, 그림, 도표 등의 다양한 시각 자료를 통해 연결된 지역의 특성을 이해한다.</p> <p>① 우리 지역과 밀접하게 교류하는 지역의 위치를 지도나 인터넷을 통해 찾아보고, 그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② 우리 지역을 다른 지역에 사는 친구에게 소개할 때 떠오르는 모습들 다양한 방식(예, 말하기, 쓰기, 꾸미기 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 ③ 우리 지역의 지명 유래와 전설, 인물, 사건 등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자연적 특징이나 당시 생활 모습을 이해할 수 있다. ④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례를 조사하고, 다양한 시각자료(예, 지도, 사진, 그래프, 도표)를 통해 지역과 지역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p>

한편 사회과(지리/일사) 자료인 <표-2>와 <표-3>의 경우 경쟁적으로 자기 학문 위주의 내용을 실기에 급급하여 단원의 수를 늘리는 데만 관심을 두었다. 2007 개정에서 등장하지 않았던 '동아시아 나라의 환경과 생활 모습'이라든지 '우리 사회의 과제와 문화의 발전' 등이 단원이 그러한 예라고 할 수 있다.¹⁰⁾

또 다른 문제는 실제로 3~4학년 내용이 비록 통합적 내용 구성이라 하더라도 역사 관련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역사 교육관련 전공자가 이 부분을 집필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현재 공청회 자료와 개정 시안 등의 자료만을 놓고 본다면 초등사회과 교육과정은 파행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역사의 경우 2007 개정교육과정 이래로 '역사교육강화'를 구실로 초등 역사를 중등과의 연속성 속에서 구성하려고 시도하였다. 그 결과 역사는 초·중등이 일정한 계열성¹¹⁾ 속에서 내용을 구성하게 되었고 5학년이기는 하지만 1년 동안 통사로서의 역사를 사회과 내에 안착시키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지리/일사의 경우에는 사실 2007 개정에서도 처음에는 수세적인 입장이라는 하였지만 역사의 입장을 확

10) 이 부분은 '현장적합성 및 최종 검토 단계'에서 일부 수정이 되기는 하였으나 단원 설정 자체는 수정되지 않았다.
 11) 비록 일부에서 초·중·고에서 3회에 걸쳐 같은 내용이 같은 방식으로 반복된다는 비판이 있기는 하지만 같은 집단(역개추, 혹은 국편)에서 초·중·고의 역사 내용을 일관되게 구성되게 구성하였다는 점에서 일관된 내용의 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가령 '초등에서는 일화, 인물이 강조되는 '성인 통사' 중학교에서는 정치사 중심의 통사 사회 문화요소 연계, 고등학교에서는 시대별 사회 구조와 주변국가와의 관련성 파악'으로 일관성 있는 구성을 강조하고 있다(국사편찬위원회, 2011: 5).

인한 후로는 사실상 대등한 입장이거나 오히려 공세적인 입장에서 대응하였다. 애초에 역사 쪽에서 ‘6학년 1년간’의 구성을 시도하였으나 이를 막아냈고 결과적으로 2007 개정에서도 손해 본 것이 없는 내용 구성이었다.

2011 개정교육과정에 와서는 역사 쪽에서 본격적으로 ‘역사교육강화’를 들고 나오면서 역사 자체로 내용 구성을 시도하자 일사/지리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별도로 내용구성을 시도하였다. 아니 어쩌면 좀 더 체계적으로 대응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다. 왜냐하면 역사 쪽에서는 일사/지리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일사/지리에서는 3학년에서 역사 내용을 염두에 두고 교육과정을 구성하였기 때문이다.

결국 초등 사회과교육과정은 두 사공이 이끄는 대로 산에도 갔다가 바다로도 갔다가 우왕좌왕하고 있다. 초등 사회과 전체를 이끄는 선장이 없는 상황에서 ‘역사’와 ‘지리/일사’라고 하는 뱃사공이 이끄는 대로 이리저리 표류하고 있다.

대두되는 문제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초등 사회과에서 역사는 역사대로 지리/일사는 지리/일사 대로 교육과정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초등 사회과 전체를 아우르는 내용배열의 원리와 내용 구성의 원리가 적용될 수 없다. 단지 역사와 지리/일사 내용을 적당한 학년에 배치하는 문제만이 중요할 뿐이다.

초등 역사만을 놓고 본다면 나름대로 초등과 중등의 역사 내용을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즉 수직적 계열성의 문제는 어느 정도 대안이 제시되었다. 가령 “초등에서 기존의 통사 체계를 유지하되, 내용을 초등학생 수준에 맞게 쉽게 구성(이야기 식으로 재미있게 구성된 “성긴 한국사”)(국사편찬위원회, 2011: 10)가 그 예이다. 또한 “학생들의 발달 수준과 위계를 고려한 역사 교육과정 개발”과 “쉽고 재미있는 역사 교과서의 개발”을 추구한 것도 나름 의미 있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초등의 경우 일화, 역사 인물 이야기 중심, 중학교의 경우 정치사건을 중심으로 문화사 요소 연계, 고등학교는 시대별 사회구조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을 시도한 것이다. 그러나 2011 개정교육과정에서 이러한 작은 의미들이 빛이 발하지 않는 까닭은 다음과 같은 본질적인 문제들 때문이다.

첫째, 초등 교육과정 개정 주체의 부재 혹은 이원화의 문제이다. 2011 개정 사회과교육과정의 경우 ‘역사’와 ‘지리/일사’로 완전히 분리된 채로 교육과정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양측에서 주된 관심은 ‘초등 사회가 아닌 ‘중등 역사’와 ‘중등 지리/일사’라는 데에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초등의 학습자가 어떤 수준에서 역사 혹은 지리/일사를 이해하고 무엇을 어려워하는지, 그리고 교사들은 어떻게 가르치는지에 대한 논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내용을 몇 학년에 넣고 빼고 몇 단원으로 분배할 것인가에만 관심을 두고 교육과정이 개정되고 있다.

둘째 2011개정 교육과정의 개정은 순전히 교과교육의 논리가 아닌 정치 논리에 따른 개정이라고 볼 수 있다. 사실 최근의 교육과정 개정은 2007년에 있었고, 2009년에도 각론은 아니더라도 총론 수준의 개정이 있었다. 그런데도 2011년에 와서 또 개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딘지 이상하다. 실제로 역사의 경우 ‘역사 교육강화’라고 하는 큰 목적을 갖고 개정에 임했지만 사실상 초등의 경우 내용 자체가 변한 것은 별로 없다. 그러나 이전 교육과정 개정과 확연히 달라진 것은 개정의 주체와 시스템이다. 즉 소프트웨어적인 ‘역사

교육강화'는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드웨어적인 강화는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있다. 이는 다분히 초등에서도 '역사과 독립'의 가능성을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당연히 사회과교육의 성격을 재고해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셋째, 2011 교육과정의 개정을 통해 사회과교육 본질 구현이라는 측면에서 '사회과 통합'의 문제가 사실상 요원해졌다. 사회과는 사회현상에 대한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을 통해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는 교과이다. 다음에 제시된 사회과의 성격을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사회과는 지리, 역사 및 제 사회 과학의 개념과 원리, 사회 제도와 기능, 사회 문제와 가치, 그리고 연구 방법과 절차에 관한 요소를 통합적으로 선정, 조직하여 사회 현상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탐구한다. 또, 사회과에서는 우리의 삶의 터전인 지역의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 민족의 역사와 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파악과 현실에 대한 역사적인 시각에서의 이해 및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세계 시민으로서의 가치, 태도 등에 관한 요소를 중시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과 교육과정의 모습을 보았을 때 이론의 여지없이 개별 학문의 성격은 더 강해지고 사회과의 통합적 성격은 약해졌다. 사회과 통합이 사회과를 구원할 구세주이거나 현재 사회과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최선의 대안은 물론 아니다. 다만 현재와 같이 개별 학문의 성격만 강조되는 사회과의 내용 구성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먼저 학습자들의 입장에서 개별 학문을 강조하는 내용의 구성은 내용 자체가 어려워 질수 밖에 없다. 내용의 폭은 넓어지고 깊이는 깊어지기 때문에 배워야 할 양은 많고 난이도는 더 높아지는 것이다. 실제로 2009 개정교육과정 교과서의 역사 내용은 "더 어렵고 많은 내용을 더 어린 학생들(6학년→5학년)이 배워야 한다"는 문제점을 드러냈다. 2011 개정 역사 내용을 보아도 이러한 문제점은 거의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교사 입장에서 개별 학문의 성격의 구조와 체계만을 강조하는 내용의 구성은 혼란스럽고 가르치기 어려워진다. 실제로 현장의 교사들은 2009 개정 교과서의 사회과 역사 내용이 교사들도 잘 모르는 개념과 사례들이 제시된다는 이유로 가르치기 어렵다는 호소를 하고 있다.¹²⁾

또한 사회과교육학의 본질을 구현하는 측면에서도 현재와 같은 교육과정 개정의 방향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현재와 같이 연대기와 통사 형태로만 제시되는 역사 내용의 구성은 역사학의 학문적 특성을 강조하고 중등과 연계성의 측면을 강화하는 데는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의 방향은 사회과의 목표이자 본질인 '민주시민성'을 발현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가령 한국사의 통사적인 구성과 계열성을 강조하는 현재와 같은 내용의 구성은 다원주의 민주주의의 원리와 비판적 사고력 및 타인에 대한 관용과 배려를 본질로 하는 '사회과의 민주시민성'과 멀어질 수 있다.¹³⁾ 결국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과 교육과정의 구성은 사회과의 목표와 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개정인 것이다.

12)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반론도 존재한다. 개별 학문의 특성을 강조하는 것이 통합적으로 내용을 구성하는 것보다 더 체계적이어서 교사 입장에서는 더 가르치기 쉽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13) 실제로 역사를 통한 다원주의 민주시민성의 함양과 비판적 사고력의 접근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가령 역사학습을 통한 다문화 관점의 강조, 글로벌 세계 시민성의 함양, 비판적 역사접근 등은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민윤, 2009: 22~23).

사회과 성격의 재정립

2011 개정 교육과정은 이제까지와는 달리 ‘역사’와 ‘지리/일사’의 두 부분에서 사회과 교육과정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자 이제 사회과의 성격을 어떻게 보아야 하고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전술한 대로 사회과는 2007년 개정 이래로 ‘역사과의 사실상 독립’ 상황에 직면하였다. 특히 초등 사회과의 경우 유래 없이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독립적인 ‘인적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2007 개정 까지 그나마 남아 있었던 ‘사회과’라고 하는 교과와 보자기마저 사라지고 내용 영역으로서 역사와 지리, 일반사회 만이 존재하고 있다.

초등에서 마저 통합적인 사회과의 틀이 사라지고 특히 3학년의 내용 구성이 이루어진 상황은 그것이 의도적이건 행정적인 실수이건 간에 사회과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사회과라고 하는 교과와 성격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하는 상황이다.

2011 개정교육과정에 대한 검토를 통해 사회현상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역사, 지리, 일반사회 내용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사회과는 요원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회과의 모습은 ‘사회과’ 안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존재하는 사회과를 생각할 수 있다. 미국 사회과의 경우 ‘미국사’, ‘세계사와 지리’, ‘미국 민주주의의 원리’ 등이 사회과 안에 프로그램으로서 존재한다. 학년별로 존재하는 각각의 프로그램들은 각각 역사, 지리, 정치 등의 학문적 성격을 갖지만 사회과 안에서 민주시민을 육성하기 위한 과목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다음으로 교과로서 사회과라고 하는 큰 틀만을 유지한 채 각각의 학문 영역들이 병렬적으로 존재하는 형태를 생각할 수 있다. 2011 개정 교육과정에서와 같이 역사가 초등에서부터 고등학교에서 이르기 까지 독립성을 띠면서 계열성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물론 지리와 일반사회도 역사와 같이 초등에서부터 고등학교 까지 내용을 구성하여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구성하면 된다. 이 경우 시수 문제라든지 담당할 교사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사회과 내의 학문들이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큰 틀에서 사회과 안에 포함되는 성격을 갖는다.

끝으로 사회과의 각 과목들이 전부 독립 교과를 이루는 방식이 있다. 역사는 물론이고 지리와 일반사회(이 경우 정치, 경제, 사회문화도 분리)가 독립된 교과를 이루는 방식이다. 주로 유럽에서 교과로서 ‘사회과’는 존재하지 않지만 ‘사회 탐구’ 혹은 ‘사회 인식’ 교과로서 역사 혹은 지리 및 정치학 등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방식이다.

그다지 새로운 것도 없는 사회과의 성격 혹은 존재의 방식을 나열해 본 것은 향후 우리의 사회과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과 교육과정의 과정으로 본다면 사회과는 위에서 제시한 ‘병렬적 과목들이 나열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혹은 더 나아가간다면 사회과는 사라지고 ‘사회 탐구’ 혹은 ‘사회 인식’ 교과로서 역사와 지리, 혹은 사회과학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사회과의 성격을 어떻게 설정하든 그것이 절대 선이거나 악일 수는 없다. 다만 어떤 입장이든 현재와 같이 일관성도 없고 목표와 성격이 내용과 불일치한 것이서는 곤란하다. 사회과 교육과정 개정의 주체들이 좀 더 정직하게 사회과의 성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교과와 교육에 바탕을 둔 사회과 성격에 대한 논의가 아닌 현재와 같이 교육과정 정치학에 휘둘리는

사회과로 인한 피해는 사회과 학자들이나 교사들이 아니라 미래를 살아갈 학생들이 고스란히 받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2011.8.1~8.2). 교과 교육과정 개정안 현장 적합성 최종 검토자료(사회과), 미간행 자료집.

교육과학기술부(2011.8.1~8.2). 교과 교육과정 개정안 현장 적합성 최종 검토자료(역사), 미간행 자료집.

국사편찬위원회(2011.6.30), 2011 역사교육과정 개정(안) 공청회 자료.

민 윤(2009). 다문화 역사학습: '기억의 역사를 통한 비판적 접근', **사회과교육연구 제16권 1호**.

이동원(2003). 한국사회과의 형성과 변화논리, 한국교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최용규·정호범·김영석·박남수·박용조(2008). **사회과교육과정에서 수업까지**, 교육과학사.